국감 이틀째 '검증 공방' 격화

"李 건보료 탈루" "鄭 부친 친일 의혹"

한나라 "통일부장관은 北 메신저인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정부 특혜보증 논란

국회는 18일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으나, 첫날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동영 두 대선 후보의 검증 공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건물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정 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 등을 거론했다.

◇**검증 공방**=보건복지위 소속 대통합신당 강기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 후보가 소득신고를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대명통상'과 '대명기업' 등 사업장이 연간 9억5천여만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할 경우 매달 379만원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위 국감 보도자료에서 "금융조합은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의 공출기관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패권주의에 협력하는 기관이었으며 정 후보의 부친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금융조합에서 근무했다"며 "정 후보는 부친의 친일 행각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메신저' 논란**=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한 답변 내용을 둘러싸고 한 때 소동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어제 통일부 장관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데 상호주의 원칙 아래 등거리·등면적을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면서 "통일부장관은 NLL(북방한계선)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통일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는 장관인가, 북한에서 내려온 메신저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통일장관이 망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사람이 있는데서 지적해야지 통일장관이 없다고 해서 망언이네 하면서 신문에 난 기사를 멋대로 해석하느냐"고 황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박찬석 의원도 "북한의 메신저가 뭘 말하는 것이냐"고 거들었다.

◇**김상진 게이트**=한나라당 의원들은 건설업자 김씨가 허위서류를 근거로 신보와 기보로부터 보증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건설업자 김씨가 소유한 계열사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은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했고 두 기관은 이를 승인했다"며 "누가 허위 계약서에 속았는가. 과연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대통합신당 문석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보가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건설업체들에 보증을 해온 관행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보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증 논란**=이날 국회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사업이 정 후보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라는 점을 의식한 듯 정부의 무리한 특례보증 압력으로 기보와 신보가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중 13개 업체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그나마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신보와 기보를 통해 특혜보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통합신당 측은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보증규모를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 강남 지역에 소유한 건물 3곳의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 이번엔 '네탓 공방'

신당-한나라 파행 책임 놓고 설전

BBK 주가조작 관련자에 대한 단독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멱살잡이까지 하며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정무위가 18일 가까스로 개의됐으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전날처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전 10시 개의와 함께 양 측간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신당 측은 증인채택 강행 배경과 관련,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 감싸기에 급급해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는데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측은 '날치기 폭거'라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병석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석에 앉지도 못했고, (신당측이)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도 아닌 미수에 불과하다"면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통합신당 간사인 박상돈 의원은 "당시 모든 국감 회의 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리를 비켜 줄 것을 수십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도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김경준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의 말만 듣고 국민을 현혹시키면 안된다고 하면서 뒤로는 증인을 빼달라며 이 후보를 감싸려고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문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증인을 채택 안하려는 데 있다. 정치공세는 그만 두고 도곡동땅과 BBK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당은 지난 11일 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를 비롯해 BBK 주가조작과 관련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신당, 국회동의 추진

대통합민주신당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문제에 대해 국회 지지결의와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당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안한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는데 빨리 정책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길 바란다"며 "당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촉구 결의 및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 온 만큼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남북간 합의서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남북관계 발전법 조항이 있는데다,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과 함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은 대선후보가 확정된 만큼,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후보가 먼저 제안하면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공조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후보는 18일 김진표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신당의 분야별 정책기조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동의를 포함한 구체적 이행 부분은 진행경과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당이 국회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인물 최인기 민주당 의원

"국고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지수 적용을"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일반 유권자는 1만원 상당의 향응만 받아도 50배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는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법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또한, 최 의원은 18일 실시된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과 관련 "농어촌이 있는 시·군은 세출예산 규모가 커 사회보장지수가 낮은 반면, 대도시 자치구는 세출예산 규모가 작아 지수가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는 대도시의 자치구에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선정시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최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차세대 전자정부와 u-City',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정책 제안', '119 이용실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등 3권의 정책자료집을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의 국감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오전 10시·광주고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오후 2시 광주고검)

▲**정보통신위원회**=광주지방기상청(오전 10시·기상청)